



사회진보연대 발행 |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259-12번지 3층 | 02-778-4001~2 | www.pssp.org | pssp4001@gmail.com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 광주시 북구 신안동 135-7 SJ빌딩 2층 민중행동 | www.pssp.org/gj | pymjhd@gmail.com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580-27 2층 | www.pssp.org/ic | icpssp@jinbo.net
 후원계좌 | 하나은행 771- 910262-85707 (정영섭)



비틀거리는 박근혜 정권 공공부문 노동자의 힘으로 끝장내자!

노조 탓, 북한 탓으로 위기 모면?

정부는 고용을 늘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성과자 퇴출제, 쉬운 해고로 이어지는 성과연봉제는 정부의 노동계약이란 사실을 만천하가 알고 있다.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노조의 파업을 비난하고,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

박근혜 정권은 동북아시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졸속적 한일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을 10억 엔에 팔아치웠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외면했다. 지진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총체적인 안전대책도 없고 핵발전소도 그대로 가동시킨다. 재벌 살찌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노동계약을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연일 터져 나오는 부정부패 사건들에서는 썩은내가 진동한다. 정권 말기에 민생은 온데간데 없고 사리사욕 채우기에만 바쁘다. 이제는 경찰의 물대포로 인해 돌아가신故 백남기 농민을 온갖 핏수와 압박으로 두

번 죽이려고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성과-퇴출제 도입도 불법적으로 강요했다. 성과-퇴출제 조기 도입을 압박하며 공공기관의 불법행위를 조장해왔다. 교섭을 외면하고,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이사회를 통해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날치기 통과한 박근혜 정권이야말로 불법행위의 당사자이다.

모든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도입한 공공부문 파업에 대해 '불법파지'를 붙이고, 득달같이 직위해제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이 정권에는 민생도, 민주주의도, 노동권도 없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정당한 파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대오는 굳건하고 지지는 확대되고 있다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 파업이 2주차에 접어들었다. 열차운행률은 80%대로 떨어졌고 코레일의 수도권 전철은 운행률이 10% 가량 줄었다. 의왕컨테이너기지의 철도 수송량은 36% 수준이다.

다급해진 정부는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화물연대가 10일 파업에

들어갔다고 선언하면서 물류 타격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10월 4일부터 철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서울대병원, 가스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에 더해 가스기술공사지부, 강원랜드노조가 파업에 합류해서 10개 공공기관, 4만4천 명으로 대오가 확대되었다. 2차 총파업집회에는 3만 명이 결집하였다.

이런 기세를 꺾기 위해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은 입만 열면 철방뿔이니 귀족노조니 운운하지만 국민의 외면을 당하고 있다. 더욱이 백남기농민에 대한 살인폭력, 부정부패, 경제침체, 파국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등 거의 모든 정책에서 실패한 박근혜정권은 지지율조차 30% 정도에 불과하여 갈수록 내리막길이다.

파업승리의 길: 단결, 파업효과 극대화, 민중투쟁의 확대

파업 투쟁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도 점점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노동자의 권리,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파업을 지지한다", "우리 모두를 위해 싸워주어 고맙다", "공공부문에 '성과'가 웬 말이나"며 여기저기에 총파업을 지지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댓글을 쓰고 노동자들의 글과

영상 등을 퍼나르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성과-퇴출제를 통해 노동계약, 요금인상, 안전위협, 과잉진료, 노후불안, 민영화로 독주하고 있다. 국민피해 정책을 막기 위한 정의로운 파업, 공공기관 총파업은 승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파업대오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단결해야 한다. 불통정권에 맞서는 파업에서 각계약진이 아니라 단결투쟁으로 파업의 힘을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에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는 화물연대의 투쟁이 더해지면 파업투쟁의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또한 백남기농민 살인폭력에 대한 박근혜정권의 책임을 묻는 투쟁에 실질적으로 연대투쟁하면서 전체적으로 정권에 대한 투쟁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 단결, 파업효과 극대화, 전체 민중투쟁의 확대가 승리의 길이다.

공공기관의 돈벌이 성과경쟁에 맞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부패한 박근혜 정권의 노동계약을 막아내고 반드시 폐기시키자. 노동자가 앞장서서 전 민중의 투쟁으로 무능정권, 살인폭력정권, 노동계약정권, 사드추진정권, 세월호외면정권, 부패비리정권인 박근혜정권을 끝장내자.

백남기 농민을 두 번 죽일 것인가? 부검 강행 중단하라!

잠들지 못하는 장례식장

박근혜 정권의 아만적 폭력과 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9월 25일, 민중총궐기에 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신 백남기 님이 317일간 사경을 헤매다 끝내 돌아가셨다. 바로 그 날 경찰은 사죄는커녕 병력을 동원해 병원을 통제했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고자" 시신의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했다.

유가족들은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절대로 닿게 하고 싶지 않다"며 명확한 부검거부 입장을 밝혔고, 경찰의 강제 침탈을 우려한 시민들은 장례식장에 모여 밤을 새우며 곁을 지키고 있다.

정권은 이런 유가족과 시민들의 목소리 또한 짓밟고 있다. 처음 부검영장을 기각했던 서울지방법원은 다시 28일에 부검영장에 여러 조건을 붙이는 사상 초유의 '조건부 영장'을 발부했다.

전 국민이 아는 사망원인

부검은 필요하지 않다. 부검은 고인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몰라서 억울함을 풀고



싶을 때 하는 것이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은 전 국민이 알고 있다. 다만 박근혜 정권과 그 하수인인 검찰과 경찰만이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명백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충남9호 살수차는 경고·곡사 살수 없이 즉각적으로 직사살수를 했고, 백남기 농민은 4차 살수에서 쓰러진 채로 1분 18초 간 직사살수를 계속 맞았다. 응급실 이송 당시 CT영상도 공개되었다.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외상에 의한 뇌

출혈이 심각한 상태"임이 확연히 드러났다.

부검을 고집하면서 국가폭력에 의한 사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다. 사망진단서에 대한 서울대병원 특위의 해명도 똑같다. 지침원칙 상 외인사가 맞지만, 담당 의사가 진정성을 갖고 병사라고 진단했으므로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원장과 상의를 했다는 기록이 분명히 있고, 서울대 병원의 직인이 찍혀서 나오는 공문서에

대해 어떻게 기관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이 가능한 것인가.

부검 강행 중단하고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지난 해 민중총궐기 이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즉각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다. 그러나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발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은 제대로 된 검찰 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다. 검찰은 10개월이 지난 이제서야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소환하면서 살인진압을 은폐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만행들은 집권 내내 반노동적이고 반민주적인 독선으로 일관했던 박근혜 정권의 말로를 보여주고 있다. 민심은 이미 정권에서 떠났다.

박근혜 정권이 부검을 강행한다면 산산조각이 날 것은 자기 자신이다. 부검 강행을 당장 중단하고, 고인 앞에 사죄하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살인폭력정권 물러가라!

핵무장은 평화의 길이 아니다 사드 반대, 반전반핵으로!

지난 9월 9일, 북한은 전격적으로 5차 핵 실험을 단행했다. 4차 핵실험 이후 8개월만이다. 북한은 각종 미사일 실험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과거에는 북한이 미국과 협상하기 위한 카드로서 핵실험을 했다면, 지금은 핵무장 자체가 목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전쟁위기 고조하는 한미동맹

미국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전략적 인내'를 수정하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초당적인 외교정책 연구소인 미국외교관계협의회(CFR)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대화도 시도해야겠지만, 이것이 무산될 경우 북한의 실험용 미사일 요격을 포함한 더욱 강경한 군사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핵공격을 할 조짐만 보여도 선제타격하는 대량응정보복(KMPR) 작전계획을 언급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탈북을 선동하고 북한체제의 붕괴를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강경 대응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지금껏 강도높은 유엔 제재와 군사훈련이 있었지만 북한의 핵무장은 오히려 강화되어왔다.

북한의 핵무장은 평화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침식한다

북한의 핵무장 역시 한반도 평화의 전망을 축소시킨다. 북핵은 보수세력이 사드 반대 운동과 같은 평화운동을 억압할 빌미를 준다. 더 큰 문제는 호전적 여론이 힘을 얻는 것이다. 북한 핵실험 소식에 사람들은 '북한 핵을 막으려면 사드라도 필요하다'라든가 '더 강한 군사적 대안', 심지어는 '남한의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런 조건이라면 어느 누구도 북한과 한미 양국의 극한 대결을 막을 수 없다.

반전반핵의 원칙을 재확인해야

지금까지 남한의 평화운동은 미국의 핵, 군사정책의 호전적 본질을 폭로해왔다. 이는 국가 지도자들에게 한반도에서 민중의 생명을 담보로 극한대결을 벌이지 말라는 호소이자 경고였다. 그 정신을 살려야 한다.

평화운동은 북한의 핵무장에도 일관된 비판을 가해야 한다. 반전반핵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핵무장도 군사적 대결도 아닌 다른 평화적 대안을 보여주자.

사회운동의 미래를 개척하는 밑거름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와 자본의 폭력에 맞서 함께 나아갑시다.
월간 《오늘보다》를 구독하세요!

구독신청서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납부 방법 계좌이체 (1년 3만원) CMS 정기납부 (매월 3천원)

*이래 내용은 CMS 정기납부자만 작성하면 됩니다

예금주

생년월일

은행

계좌번호

이체희망일 5일 15일 25일

정기구독자가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
우측 신청서 빈칸을 채워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ID 오늘보다에게 보내주세요!
정기구독료 연 4만원 / 월 4천원
하나은행 771-910262-87007 정영섭

✉ today.boda@gmail.com
🏠 todayboda.net/subscribe
☎ 02-778-4001

※ 노동조합, 시민단체, 학생회, 동아리, 소모임 등 단체구독 환영